# 연금·의료, 검찰 개혁, 군복무 단축…공약 줄줄이 수정·보완론

김용준 인수위원장(왼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오른편)에서는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황윤성 법무부 법무실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정부 부처, 재원·실효성 부정적 입장
## 인수위 "100% 이행" 불구 조정 관심

박근혜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대해 해당 부처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어떤 식으로 수정·보완·조정해 낼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후 일부 공약의 재원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부처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연금·의료복지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연금·의료·빈곤구제 등 복지 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만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친 기초연금만 해도 연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면 연 2조~3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과 통합해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부 충당하는 공약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안정용으로 낸 연금을 현재 노년층을 위해 미리 당겨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

| | |
|---|---|
| 11일 |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 12일 | 국가정보원, 법무부, 지식경제부 대검찰청, 국세청 |
| 13일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경찰청 |
| 14일 |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
| 15일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여성가족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병무청 |
| 16일 |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
| 17일 |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을 놓고서도 박 당선인은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폐지안을 수용하는 대신 지휘기능만 갖는 중수부 존치, 폐지 시 일선 지검으로 수사기능 이전 등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4개 검사장급 중 차관급 이상을 9자리 정도 줄이는 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인수위의 대체적인 기류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이 공약 재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하면 간부숙소까지 포함해 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찮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 준비 단계에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철저히 따졌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수위원은 "공약 100%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업무보고 이후 공약의 정책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 인수위원은 "재원도 공약대로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약을 수정할지,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라도 추진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출 구조조정 81조5000억 모아라"

### 기재부, 당선인 대선공약 실현 재정마련에 속도 낸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의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세출(歲出) 구조조정으로 기재부가 끌어와야 하는 돈은 81조5000억원이다.

인수위는 13일 기재부에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도록 주문했다.

류성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중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252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추산,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한다.

기재부는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608개 재정 투입 사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비과세·공제 혜택 축소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잘 관리하면 여윳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와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임대주택 연 15만 가구 공급

###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거래 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작년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 가구(임대 12만·분양 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한 철도 부지 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연간 4만 가구 공급하되, 철도부지 이외에 동사무소·우체국·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위사업청의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원(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기종 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가스·전력 독과점 해제

### 인수위, 경쟁체제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과점 체제인 가스 및 전력 시장의 경쟁 체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의 수입은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전력생산 및 판매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및 가스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측에서는 강력한 구매력을 통해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실제 천연가스 도입 가격은 시황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력이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력시장은 한전에서 발전·송배전·판매를 사실상 도맡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발전 부문에서만 한전에서 떨어져 나간 6개 발전사가 경쟁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전의 자회사 구조로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략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